

오늘 특검법 공포 안하면...민주 “한덕수 탄핵” 압박

“시간 지연 헌법 준수 의지 없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예고 일부 “국정 안정 위해 계엄 연루 국무위원 모두 책임 물어야”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꺼내 들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특검법 수용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나오는 조유의 사태까지 예고하면서 여론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오늘로 벌써 20일째다.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20일 동안 수 많은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인멸과 말뚱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대행을 자처하고 있다”며 “특검법 제3조는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체없이 의뢰했기 때문에)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 이어 “대통령의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고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특검법 공포를 통해 내란 세력을 옹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한 권한대행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을 당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시나리오까지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로 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과감한 공세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에 유리해진 상황에서 여론의 반발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쪽으로의 역풍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 등 “거리투쟁”과의 결합을 이어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미 민주당 의원 다수가 지난 22일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남태령 집회’ 현장을 찾기도 했다. 여기에 오는 28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주도 장외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 26일 첫 회의...의제·참석 범위 조율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이다.

양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6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참석 범위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7일, 30일, 다음달 2·3일에 추가로 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고 국회는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26일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해야 하고, 27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표결을 위해 27~28일께 추가 본회의 개최를 의장실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이를 동안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절의를 했다. 대정부 질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연말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지 대정부질문 등을 계속하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국무회의 ‘쌍특검’ 법 상정 안해...“시간 더 달라”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특검법 박찬대 원내대표 “책임 묻겠다”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면서 “24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군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네 번째 통과한 김여사특검법은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이전보다 더욱 강

해졌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내란일반특검법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비중적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달려있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